2017년 소방간부후보생 - 행정학

해설 : 이승철

01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이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 소방간부

- ① 신관리주의 ② 공공선택이론 ③ 신공공서비스이론 ④ 주인-대리인이론 ⑤ 거래비용이론

해설

③ (×)신공공서비스론은 신공공관리론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이론이다.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지향성과 고객중심의 행정, 정부축소, 능률성 이념, 기업논리만을 중시하고 시민의 정치성과 형평성·민주성을 무시했다. 정부의 노릇기보다 방향키 역할을 강조하여 목적지 설정에 관한 관료권력만 강화시키고, 결국 고객중심을 주장하지만 정부의 소유자(배의 주인)인 시민들이 배제되었다. 신공공서비스론은 관료중심의 권력배분적 시각보다 정부의 소유자인 시민의 관점에서 재출발해야 한다고 보고 정책을 집행하면서 행정이 국민들에게 봉사하고 권한을 위임하며, 통합과 대응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적 제도 구축을 주장하였다.

•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배경 : 공공선택론, 신관리주의(New Managerialism), 합리적 선택 신제도론(대리인이론, 거래비용이론), 공급측경제학

답 ③

02 포스트모더니티 행정이론에 입각한 행정인의 행태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017 소방간부

- 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에 따른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상력을 동원한다.
 ② 타인을 객관적인 관찰 대상으로서의 인식적 타인(epistemic other)이 아니라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할 도덕적 타인(moral other)으로 본다.
 ③ 관료의 분류 방식에 따라 시민들을 특정 범주에 규격화하거나 고정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④ 고정관념이 되어버린 '상위설화(meta narratives)'에 대한 비현실적인 근거를 해체하려고 노력한다.
 ⑤ 기존 학문의 영역 간 경계를 명확히 하고 학문 내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해설

포스트모더니티 행정이론 중 하나인 D. Farmer의 반(反)관료제 모형에서 제시된 내용 중 ①은 상상(imagination), ②③는 타자성(alterity), ④는 해체(deconstruction; 탈구성)와 관련된다.

⑤ (×) Farmer에 따르면 모든 지식은 그 성격과 조직에 있어서 '고유'영역이 해체되어 지식의 경계가 사라진다고 본다. 이를 영역해체[탈영역화, 탈영토화](deteritorialization; 학문 간 경계 파괴)라 한다. 행정학의 고유영역이라 믿는 지식의 성격이 변화하고 행정조직의 계층성 등이 약화된 탈관료제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본다.

■ 파머(D. Farmer)의 반관료제론

상상 (imagination)	단순히 상상력을 키운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새로운 사고의 틀로 현상과 문제를 접하는 태도임. 소극적으로는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며, 적극적으로는 문제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것.
해체[탈구성] (deconstruction)	지배적 패러다임의 통합을 거부하고 특정 상황에서의 진정한 의미를 탐구. ① 텍스트(언어, 몸짓, 이야기, 설화, 이론)의 근거를 파헤쳐보는 것으로 특정한 상황 하에서 텍스트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함. 즉, 텍스트들을 무조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상황적 맥락성을 감안해 재해석. 예 '행정의 실무는 능률적이어야 한다.', '행정은 객관적으로 연구될 수 있다.'는 등의 설화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의문을 제기하고 해체. ② 과학적 지식의 우월적·특권적 지위를 부인하고 이를 해체해 당연한 필요에 관한 구체적 이론의 발견을 더 중시. 종전의 합리주의 행정학, 거시이론, 상위(meta)설화, 지배적 패러다임에 대한 회의를 갖고 대안을 끊임없이 모색.
영역해체[탈영역화] (deteritorialization)	모든 지식은 그 성격과 조직에 있어서 '고유'영역이 해체되어 지식의 경계가 사라짐. 행정학의 고유영역이라 믿는 지식의 성격이 변화하고 행정조직의 계층성 등이 약화된 탈관료제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으로 봄.
타자성(alterity) -주체와 객체의 구별 해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관찰대상에 불과한 인식적 객체로서가 아니라, 자신과 언제든지 소통과 교류가 가능하고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할 도덕적 타자(moral other)로서 인정하는 것이며, 즉자성(卽心性: 타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족적 상태, I-ness, asmita)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① 타자성은 ② 타인에 대한 개방성(행정의 실무가 반권위주의적이 되도록 구성·집행되어야 하며 서비스 지향적 태도 필요), ⑥ 다양성의 선호(다른 것에 비해 어떤 특권적 지위를 누리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⑦ 상위설화에 대한 반대(비현실적인 근거를 해체하는 것. 이미 짜인 개념적·제도적 틀 탈피), ⑧ 기존 질서에 대한 반대 등을 특징으로 함. ④ 행정에서 타자를 인정함은 관료적 권위주의의 거부, 즉 반행정(反行政: 기존의 모순적 행정체제 거부)의 성격을 띠. 즉 하향적 거시정치가 거부되고 상향적 미시정치가 발달되어야 한다는 것. 이렇게 할 때 경직된 관료제가 모든 의사결정을 공동체에게 개방하고 시민의 요구에 더 가까이 다가가며 공무원에게 공동체 권력에 기초한 시민참여이론을 수용하게 함.

답 ⑤

03 피터스(Guy Peters)가 제시한 뉴거버넌스 정부개혁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7 소방간부

- ① 전통적 정부모형에서 문제의 진단기준은 계층제이다.
 ② 시장모형에서 구조의 개혁방안은 분권화이다.
 ③ 참여정부모형에서 관리의 개혁방안은 가변적 인사관리이다.
 ④ 유연조직모형에서 정책결정의 개혁방안은 협의·협상이다.
 ⑤ 저통제 정부모형에서 공익의 기준은 저비용이다.

해설

- ① (×) 전통적 정부모형에서 문제의 진단기준은 전근대적 권위
- ③ (×) 참여정부모형에서 관리의 개혁방안은 총체적 품질관리(TQM), 팀제, 권한위임, 서비스 현장제 등
- ④ (×) 유연조직모형에서 정책결정의 개혁방안은 실험(experimentation), 시행착오
- ⑤ (×) 저통제 정부모형에서 공익의 기준은 창의성(creativity), 활동주의(activism)

■ 피터스(G. Peters)의 뉴거버넌스 모형

구분	전통적 정부	시장정부	참여정부	신속정부[유연한 정부]	탈규제[저통제]정부
문제진단	전근대적 권위	독점	계층제	영속성(경직성)	내부규제
구조의 개혁방안	계층제, 관료제	분권화	평면조직(계층제 완화)	가상조직	통제기관의 평가기관화
관리의 개혁방안	직업공무원, 내부규제, 절차적 통제	성과급, 민간부문의 기법, 목표관리제	총체적 품질관리(TQM), 팀제, 권한위임, 서비스 현장제	가변적 인사관리(임시직, 계약직), 직업공무원제 탈피	관리상 재량권 확대 리더십 강조, 조직몰입
정책결정 개혁방안	정치·행정2원론	내부시장 시장적 유인	협의(consultation) 협상(negotiation)	실험(experimentation) 시행착오	기업가적 정부 (entrepreneurial government)
공익기준	안정성(지속성) 평등	저비용(low cost) 산출·성과	참여(involve-ment), 협의(consultation), 투명성	저비용(low cost) 조정(coordination)	창의성(creativity) 활동주의(activism)
조정	상의하달, 명령통일, 계층제	보이지 않는 손	하의상달	조직개편 새로운 조직유형 도입	관리자의 이익
오류 발견 및 수정	절차, 내부규제	소비·생산자의 선호 등에 의한 시장적 신호	시민참여기제 등의 정치적 신호	오류의 제도화(고착화) 방지	자기교육효과 등을 통한 보다 많은 오류 수용
공무원 제도	직업공무원제	시장기제로 대체 직업공무원단 해체	계층제 축소 직급별 공무원의 축소	임시고용제 활용 고위공무원단 활용	내부규제 철폐 관료들의 창의성 유도
책임성	대의정치 장관책임론	시장에 의존 창의성 보다 생산성 강조	소비자 불만에 의존 (정치적 신호와 유사)	명확한 제안 없음	사후통제에 의존

답 ②

04 다음 중 윌슨(J. Wilson)의 규제정치모형에서 말하는 고객정치(client politics), 즉 정부가 공익보다는 피규제집단의 이익을 수호 하는 포획(capture)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으로 옳은 것은?

2017 소방간부

- ① 편익과 비용이 각각 소수의 특정 집단들에 집중된 경우
- ② 편익과 비용이 각각 다수 국민들에게 넓게 분산된 경우
- ③ 편익은 다수 국민에게 분산되고 비용은 소수의 집단에게 집중된 경우
- ④ 편익은 소수의 집단에게 집중되고 비용은 다수 국민에게 분산된 경우
- ⑤ 편익과 비용의 규모가 거의 비슷한 경우

해설

■ J. Q. Wilson의 규제정치모형

		감지된 규제의 편익(수혜자집단)	
		집중(특정 소수)	분산(불특정 다수)
감지된 규제의 비용(비용부담집단)	집중(특정 소수)	이익집단정치(interest-group politics) 예) 의·약분업, 한·약규제, 노사관계규제, 중소기업고용업종규제	기업가적 정치(entrepreneurial politics ; 운동가의 정치) 예) 환경오염규제, 자동차안전규제, 산업안전규제, 유해성 물품에 대한 위생규제, 원자력발전 안전규제
	분산(불특정 다수)	고객의 정치(client politics) 예) 진입규제(의사·변호사 등 직업면허, 인·허가제도), 농산물 최저가격규제, 수입규제	대중정치(majoritarian politics ; 다수의 정치) 예)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 낙태·종교활동에 대한 규제, 신문·방송·출판물 등 언론에 대한 윤리규제, 사회보장법, 음란물 규제,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 등

답 ④

05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2017 소방간부

- ① 합리모형에서는 모든 가능한 대안들 간의 비교분석을 통해 최적의 대안이 선택된다고 본다.
- ② 점증모형에서는 기존의 정책에 부분적인 수정이 이루어지는 식으로 정책이 결정된다고 본다.
- ③ 관료정치모형에서는 관료들 간의 흥정, 타협, 연합, 대결 등에 의해 정책이 결정된다고 본다.
- ④ 만족모형에서는 정책결정자보다는 국민들을 최대한 만족시키기 위한 최선의 정책을 모색한다고 본다.
- ⑤ 쓰레기통모형에서는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기회라는 네 가지 흐름이 따로따로 흘러 다니다가 우연한 계기에 임의적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해설

- ④ (×) 만족모형은 최적대안은 아니지만 의사결정자 개인이 주관적으로 만족할만한 대안을 선택한다는 모형이다.

답 ④

06 정책의제화의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경우는?

2017 소방간부

- ① 일상화되지 아니한 특수문제의 경우
- ② 사회 이슈와 관련된 행위자가 많은 경우
- ③ 정책 이해관계자의 조직화 정도가 높은 경우
- ④ 정책의제화를 요구하는 집단의 규모가 큰 경우
- ⑤ 정책담당자 또는 정책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기관의 입장에서 정책문제의 해결이 상대적으로 쉽게 해결될 것으로 인지되는 경우

해설

- ① 일상화된 정책문제는 선례답습식으로 쉽게 의제화된다. 일상화되지 아니한 특수문제의 경우 의제화가 곤란하다.
- ② 사회 이슈와 관련된 행위자가 많은 경우 문제 해결의 필요성이 높아지므로 의제화가 용이하다.
- ③ 이해관계자가 넓게 또는 좁게 분포되어도 조직화 정도가 높으면(조직비용이 낮은 경우) 정책의제화가 용이하고, 조직화 정도가 낮으면(조직비용이 높은 경우) 정책의제화가 곤란하다.
- ④ 피해집단(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을 요구하는 집단)의 규모가 크고, 자원이 많고, 문제해결 요구 강도가 강할수록 정책의제화가 용이하다.
- ⑤ 문제의 해결 가능성이 있을 경우 정책의제화가 용이하다.

답 ①

07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게 하고 다양한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문제 사안에 따라 임시적으로 운영하고 업무 종료 후에는 해체하는 조직형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2017 소방간부

- ① 막료 조직 ② 위원회 조직 ③ 비공식 조직 ④ 애드호크라시 ⑤ 테크노크라시

해설

adhocracy는 다양한 전문기술을 가진 비교적 이질적인 전문가들이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집단을 구성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변화가 빠르고 적응적이며 일시적인 체제이다. 대체로 영구적인 부서나 공식화된 규칙, 일상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표준화된 절차가 없이, 프로젝트에 따라 전문요원들이 팀을 구성하여 상황에 맞게 문제를 해결해 가는 특성을 지닌다. 새로운 행정수요나 여러 부처 또는 부서들이 관련되어 있는 주요 의제들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기 위하여 유관 조직들이 공동으로 형성하여 일정 기간 동안만 운영되는 '한시적 성격이 강한 문제해결중심의 협동체'라고 할 수 있다.

답 ④

08 조직의 분권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2017 소방간부

- ① 고객중심적 서비스의 요청 ② 안정적인 조직 환경 ③ 규칙과 절차의 발달
- ④ 권위주의적 문화 ⑤ 조직 재정자원의 규모 팽창

해설

① 고객에 대한 신속하고 상황적응적인 서비스 요청이 있는 경우 분권화의 촉진요인이 된다. ②③④⑤는 집권화의 촉진요인이다.

■ 집권화와 분권화의 촉진요인

집권화의 촉진요인	분권화의 촉진요인
㉠ 위기상황에서 강력한 리더십 필요 시	㉠ 기술 및 환경 변화의 복잡성·동태성 증가(조직의 적응성 필요)
㉡ 안정적인 조직 환경	㉡ 조직이 속한 사회의 민주화 촉진
㉢ 조직활동의 일관성·통일성이 필요한 경우	㉢ 조직구성원의 참여와 자율규제를 강조하는 동기유발 전략
㉣ 하위조직단위간의 의존도는 높는데 횡적 조정은 어려울 경우(갈등 조정)	㉣ 조직의 쇄신과 개인적 창의성 발휘
㉤ 소규모 조직(구성원 수가 소수), 신설조직(조직의 역사가 짧아 선례가 없어 설립자의 지시에 의존)	㉤ 조직 참여자에 대한 힘 실어주기(empowerment)의 요청
㉥ 재정자원의 규모 증대 , 중요도가 높은 결정사항	㉥ 조직규모의 확대(대규모 조직 - 구성원 수 다수)
㉦ 특정 기능에 대한 조직 내외의 관심 증대	㉦ 구성원의 인적 전문화 및 능력 향상
㉧ 권위주의적 문화	㉧ 고객에 대한 신속하고 상황적응적인 서비스 요청
㉨ 규칙·절차의 합리성·효과성에 대한 신뢰 증가(공식성 증가)	㉨ 최고 관리자가 세부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에서 벗어나 장기계획이나 정책문제에 대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바치고자 할 때
㉩ 일의 전문화, 능력향상을 수반하지 않은 분업의 심화, 기능 분립적 구조설계(조정 필요성이 증대되므로)	㉩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 교통·통신의 발달로 상급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집중될 경우(단,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분권화의 요인으로 보는 견해도 있음)	
㉫ 하급자·하급기관의 역량·능력 부족	

답 ①

09 공식집단에 대비되는 비공식집단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2017 소방간부

- ① 조직 목표와 집단 목표의 일치 ② 집단의 목표나 임무의 명확한 규정
- ③ 인적 자원 및 물적 자원의 획득 용이 ④ 구성원에게 정서적 안정감 부여
- ⑤ 조직의 공식적 요청에 의해 형성

해설

- ① (×) 공식조직은 보통 공적으로 설정되는 목표는 하나뿐이고, 목표를 향해 조직 전체가 통합되어 있지만, 비공식조직은 구성원의 욕구 또는 소망의 다양성에 따라서 목표가 달라지며 사적 성격의 목표를 추구하므로 일반적으로 비공식집단의 목표는 조직목표와 일치하지 않는다.
- ② (×) 공식조직은 법령상, 직제상, 제도적 조직으로 조직의 목표나 임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 ③ (×) 공식조직은 자원 확보를 위한 공식적 권한을 보유하므로 인적 물적 자원의 획득이 용이하다.
- ④ (○) 비공식집단은 구성원들의 귀속적 욕구를 충족시켜 심리적 안정감을 형성한다.
- ⑤ (×) 조직의 공식적 요청에 의해 형성된 공식조직과 달리 비공식집단은 동태적 인간관계로 형성된 비제도화된 조직이다.

답 ④

10 나카무라(R. Nakamura)와 스몰우드(F. Smallwood)가 제시한 정책집행의 다섯 가지 유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017 소방간부

- ① 고전적 기술관료형은 정책결정자가 집행과정을 통제하는 유형이다.
- ② 지시적 위임형은 정책결정자가 정책목표 형성에 대해서 통제권을 행사하지만 수단의 선택에 있어서는 집행자들의 권한을 인정 해주는 유형이다.
- ③ 협상형은 정책결정자와 집행자의 협상 과정을 통해 정책의 목표와 수단이 설정 되는 유형을 말한다.
- ④ 재량적 실험형은 정책결정자가 자유재량을 가지고 실험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집행자는 이를 충실하게 시행에 옮겨보는 유형을 말한다.
- ⑤ 관료적 기업가형은 집행자가 정책의 목표와 수단을 설정하고 정책결정자로 하여금 이를 수용하도록 함으로써 정책 과정을 지배하는 유형을 말한다.

해설

- ④ (×) 재량적 실험형은 정책결정자가 정책수립 능력이 없고, 집행자에게 광범한 재량을 위임하려는 유형이다. 정책결정자는 사회문제의 복잡성과 정보·기술의 한계로 인해 불확실한 상황에서 구체적 정책이나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추상적 수준에 그친다(결정자는 추상적인 일반 목표는 지지하지만,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할 능력이 없음). 정책결정자는 집행자에게 목표를 구체화하고, 집행수단을 개발하도록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집행자들은 정책목표의 구체화,

답 ④

11 어떤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특정한 자격요건 혹은 면허를 취득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정부규제의 유형 중 무엇에 속하는가?

2017 소방간부

- ① 사회규제 ② 진입규제 ③ 가격규제 ④ 품질규제 ⑤ 퇴거규제

해설

경제적 규제의 일종인 진입규제로서 사업의 인가·허가·특허, 직업면허, 수입 규제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답 ②

12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가 되는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 소방간부

- ① 외부 효과 ② 자연독과점의 발생 ③ 공공재의 존재
- ④ 관료제의 역기능 ⑤ 정보의 불균형

해설

- ④ (×) 정부관료제의 역기능은 정부실패의 원인에 해당된다.

답 ④

13 민츠버그(H. Mintzberg)가 분류한 조직 유형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 소방간부

- ① 단순구조(simple structure) : 낮은 분화수준, 높은 집권화 수준, 낮은 공식화 수준, 높은 융통성
- ② 기계적 관료제(machine bureaucracy) : 높은 분화 수준, 높은 공식화 수준, 높은 경직성
- ③ 전문적 관료제(professional bureaucracy) : 높은 수직적 분화 수준, 높은 공식화 수준, 높은 분권화 수준
- ④ 할거적 구조 / 사업부제 구조(divisional form) : 중간계층이 가장 중요한 구성부분이며, 주된 조정방법은 산출의 표준화
- ⑤ 애드호크라시(adhocracy) : 높은 수평적 분화 수준, 유기적 구조, 낮은 공식화 수준

해설

③ 전문직 관료제(professional bureaucracy)는 높은 수평적 분화 수준, 낮은 공식화 수준, 높은 분권화 수준을 특징으로 한다.

민츠버그(H. Mintzberg)의 조직유형론

조직유형	단순구조	기계적 관료제	전문직 관료제	사업부제(분화형태)	임시체제	
지배적 구성부분	최고관리층(전략정점) (strategic apex)	기술구조 (technostructure)	핵심운영층(작업중추) (operation core)	중간계선(중간관리층) (middle line)	지원참모(지원스태프) (support staff)	
조정기제	직접적 감독(직접 통제)	업무[작업]의 표준화	기술의 표준화	산출의 표준화	상호조정	
구조적 특성	전문화(분화)	낮음(업무·조직단위의 분화수준 낮음)	높음(수직적·수평적 분화)	높음(수평적 분화)	중간(최고관리층-부서 간 역할분담, 사업수행통제)	높음(수평적 분화)
	공식화	낮음	높음	낮음	높음	낮음
	통합 필요성	낮음	낮음	높음	낮음	높음
	의사결정체제	집권화	집권, 제한된 수평적 분권	수평·수직적 분권화	제한된 수직적 분권화	선택적 분권화
상황적 특성	역사	신생조직	오래된 조직	다양	오래된 조직	신생조직
	규모	소규모	대규모	다양(가변적)	대규모(조직 내 중·소규모)	다양(가변적)
	환경	단순·동태적	단순·안정적	복잡·안정적	단순·안정적	복잡·동태적
	기술	단순	비교적 단순	복잡	비교적 복잡	매우 복잡
권력	최고관리층의 권력이 강하고 독단적임	기술구조의 영향력이 큼	전문가의 권력이 강함	중간계선의 영향력이 강함, 산출별 시장분화	전문가의 권력이 강함	
예	신설행정기관, 학장주도 소 대학, 소유주 직접경영 자동 차판매소, 위기에 처한 조직	행정부, 교도소, 제철회사 등 대량생산업체, 항공회사, 우편사업조직	종합대학교, 공예품생산, 종합병원, 합동법률사무소	기업합병으로 설립된 대규모 기업, 캠퍼스가 여러 곳에 있는 대학(대학분교)	첨단과학조사연구기관, 새로운 예술단체, 설계회사, 광고사, 컨설팅회사	

- 민츠버그는 조직의 역사가 오래될수록 조직의 융통성이 떨어지고(경직성 높음) 공식화 수준이 높아진다고 보았다.
 - ┌ 단순구조, 임시체제는 신생조직 → 융통성 높고, 공식성 낮음.
 - └ 기계적구조, 사업부제는 오래된 조직 → 경직성이 높고, 공식성 높음.

답 ③

14 다음 중 행정통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 소방간부

- ①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의 확립
- ② 정책과정에서 시민 참여의 기회 확대
- ③ 옴부즈맨 제도의 확대 강화
- ④ 자체감사 기능의 활성화
- ⑤ 행정정보에 관한 기밀유지 및 보안 강화

해설

⑤ (x) 행정정보에 관한 기밀유지 및 보안을 빌미로 공개가 필요한 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을 경우 국민에 의한 행정통제가 제약될 수 있다.

답 ⑤

행정통제력 향상 방안

- ① 행정정보공개제의 활성화 : 정보의 균형을 통한 대리손실의 최소화, 국민 측의 행정통제 비용 감소.
- ② 행정절차법의 적극적 활용 : 사전적 통제제도로서, 행정재량권의 범위 축소가 목적.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각종 행정처분에는 반드시 사전예고와 당사자의 반론권 보장.
- ③ 내부고발인 보호제도의 정착을 통한 내부감시 기능 활용.
- ④ 정책과정에 대한 시민참여 기회 확대 : 독점적 정책과정에서 정책공동체·참여예산제 등 거버넌스로의 전환, 주민발안·주민감사청구·주민소송·주민소환제의 활성화 등.
- ⑤ 시민단체의 활성화 : 시혜적 재정지원이 아닌, 제도적 지원책 강구하여 관변단체화 방지, NGO는 정부의 비우호적 세력이 아니라 정부의 역할을 보완하는 파트너로서 협력관계 구축 필요.
- ⑥ 옴부즈맨 제도의 확대 강화 : 국민권익위원회가 옴부즈맨과 유사한 기능 수행. 옴부즈맨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해야 함.
- ⑦ 통제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 통제기준의 통일과 과도한 통제비용의 감소.
- ⑧ 통제기관의 독립성 : 인사적·재정적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 ⑨ 자체 감사기능의 활성화 : 궁극적·실질적 통제는 내부통제에 의해 좌우되므로 자체 감사 활성화.
- ⑩ 행정책임실명제의 도입 : 실무책임자와 결정권자를 확정하여 공표함으로써 공무원이 맡은 업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지도록 함.
- ⑪ 정치인들에 의한 행정통제 강화 : 진정한 삼권분립의 원칙 확립, 전문성 강화, 정치자금 축소와 공개, 공천제 폐지, 당내 민주주의 확립.
- ⑫ 통제기법의 개선 : 목적이나 기준에 맞는 통제, 신속적이고 적절한 통제(공무원의 심리적 위축 및 통제의 제재수단화 방지), 적극적·사전적·계속적 통제로의 전환 등.

15 다음 중 정부관료제가 그 사회의 인적 구성을 고르게 반영하도록 구성함으로써 관료제 내에 민주적 가치를 주입시키려는 의도에서 고안된 제도는?

2017 소방간부

- ① 고위공무원단
- ② 골격입법
- ③ 대표관료제
- ④ 책임운영기관
- ⑤ 업관제

해설

•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 : 한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주요 집단으로부터 인구비례에 따라 관료를 충원하고, 그들을 정부관료제 내의 모든 직무분야와 계급에 비례적으로 배치함으로써(소극적 대표), 정부관료제가 사회의 모든 계층과 집단에 공평하게 대응(적극적 대표)하도록 하는 인사제도.

답 ③

20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속하지 않는 것은?

2017 소방간부

- ① 자치조직권 ② 자치행정권 ③ 자치사법권 ④ 자치입법권 ⑤ 자치재정권

해설

자치권의 종류에 자치사법권이 포함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자치사법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라고 했어야 한다(아래 2019년 서울시7급 지방자치론 문제를 참조 바람).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협의의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이 인정된다.

답 ③

[관련기출] 지방자치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9 서울시7급(지방자치론)

- ①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 혹은 구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② 자치권에는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사법권 등이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자치권 중 자치사법권은 우리나라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④ 자치권 부여와 관련하여 자치권의 내용은 어느 국가나 동일하게 부여되어 있다.

해설

- ② (○) 자치권의 종류에 자치사법권이 포함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자치사법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 자치권의 내용은 국가마다 다르다. 특히 단체자치 국가와 주민자치 국가의 경우 자치권의 내용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답 ④

21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017 소방간부

- ① 품목별 예산제도는 통제지향적이며 관심의 범위는 투입의 규정에 국한된다.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관리지향적이며 관심의 대상에는 투입과 산출이 함께 포함된다.
 ③ 목표관리 예산제도는 구성원의 참여를 촉진하며 다른 관리기능들과 예산기능을 통합시킨 총체적 관리체제이다.
 ④ 영기준 예산제도는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경직성 경비의 필요성을 간과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⑤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top-down budgeting)는 예산규모 결정과정의 투명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

해설

①② (○)

특 성	품목별예산(LIBS)	성과주의예산(PBS)	계획예산(PPBS)	목표관리(MBO)	영기준예산(ZBB)
기준방향	통제	관리	기획	관리	감축, 의사결정
범 위	투입	투입·산출	투입·산출·효과·대안	투입·산출·효과	대안

- ③ (○) MBO는 조직의 총체적인 관리기법이므로 다른 조직관리기능들과 상호통합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MBO와 체계적인 연계가 요구되는 기능들은 예산, 인력배치, 기획, 심사평가, 교육훈련, 보수관리, 근무성적평정, 조사연구활동 등이 있다.
 ④ (○) 경직성 경비 같은 비재량적 지출은 비용편익분석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비재량적 지출이 많을수록 영기준예산의 효용은 저하되고 적용범위도 좁어진다.
 ⑤ (×)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는 전체 재정규모 분야별·부처별 예산규모 등 중요 정보를 편성기간 중에 각 부처와 재정당국이 공유하고, 분야별·부처별 자원배분계획을 정부 수상구조의 회의체인 국무회의에서 함께 결정하므로 예산규모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답 ⑤

22 점증주의 정책결정의 장단점을 합리주의 정책결정과 비교하여 서술한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2017 소방간부

- ① 대안의 탐색과 분석 비용 증가 ② 참여와 이익표출의 촉진
 ③ 갈등소지의 축소와 높은 예측가능성 ④ 정책결정과정 참여세력의 지지획득 용이
 ⑤ 발전과 개혁에 대한 장애

해설

- ① (×) 대안의 탐색과 분석 비용 증가는 합리주의 정책결정의 특징이다. 점증주의에서는 다양한 정치세력 간 타협에 의한 주먹구구식 결정(rule of thumb)이 이뤄지고 분석적·합리적 결정을 경시한다.
 ② (○) 정책은 다양한 정치세력 간 타협의 산물이므로 정책관련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이익표출을 촉진한다.
 ③ (○)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을 완화, 해결하려는 정치적 협상, 상호적응 등을 중시하므로 갈등의 소지를 줄이고 실현가능성을 확보하여, 정책결정과 집행이 용이하게 한다. 현존정책에 약간의 변화만을 가감한 정책대안을 고려하므로 획기적인 쇄신이나 과감한 정책전환이 없어 예측가능성이 높다.
 ④ (○) 점증주의 정책결정에서 최선의 대안을 판단하는 기준은 정책에 대한 동의 즉, 정책관련자의 보다 많은 동의를 얻을 수 있으면 보다 훌륭한 정책이다. 지배(dominance)가 아닌 타협(compromise)에 의해 정책을 결정하는 가치의 상대주의와 민주주의적 이념을 전제로 하며, 합의를 통해 산출된 정책결정과정 참여세력의 지지를 얻기 쉬우므로 정책은 정치적 실현가능성을 높인다.
 ⑤ (○) 반혁신적 보수주의, 현상유지성향을 지녀 쇄신적 정책결정이 곤란하며 발전과 개혁에 대한 장애가 될 수 있다.

답 ①

23 예산을 편성절차에 따라 구분하는 경우,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제출 후 국회의결 전에 예산안을 변경하는 것은?

2017 소방간부

- ① 수정예산 ② 준예산 ③ 가예산 ④ 잡정예산 ⑤ 추가경정예산

해설

예산절차 (성립시기) 상 분류	본예산(당초예산)	회계연도 개시 전에 정기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의결·확정된 예산. 새로운 회계연도를 위해 최초로 성립한 예산.
	수정예산 (예산안 변경)	예산안 제출 후 국회의 의결 전, 국회의 예산심의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안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여 제출하는 예산(국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필요) - 예산 성립 전 예산안 변경
예산 불성립시 제도 (불확정적 예산)	추가경정예산 (예산 변경)	예산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하여 성립한 후 발생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가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예산안의 국회 통과 전에 수정하는 수정예산과 다름).
	준예산 (準豫算)	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예산 불성립시),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특정한 경비에 한하여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자동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잠정적 예산.
	가예산 (假豫算)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본예산이 의결되지 못한 때, 의회가 1개월분의 예산만을 의결해 정부가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점에서 준예산과 다르고, 최초 1개월분에 한정되는 점에서 잠정예산과 다름).
	잠정예산 (暫定豫算)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본예산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 잠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어 사용하는 제도. 사용기간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원칙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의회 의결 시 정해지기도 함.

답 ①

24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책임운영기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 소방간부

- ① 책임운영기관은 사업적·집행적 성질의 행정서비스, 성과측정이 가능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공개채용한다.
- ③ 책임운영기관은 공공성과 경쟁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 ④ 책임운영기관은 인사의 자율성은 있으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 ⑤ 책임운영기관은 조직운영의 독립성은 있으나, 예산운영의 자율성은 없다.

해설

- ①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 ① 책임운영기관은 그 사무가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맞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설치한다.
1. 기관의 주된 사무가 사업적·집행적 성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서 성과 측정기준을 개발하여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사무
2.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사무
- ② (○) 동법 제7조(소속책임운영기관 장의 채용) ①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행정이나 경영에 관한 지식·능력 또는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관장을 선발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 ③ (○) 동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책임운영기관"이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公共性)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 ④ (○), ⑤ (×)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인사·조직·재정상 자율성을 부여하되 그 운영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

답 ⑤

25 막스 베버(Max Weber)의 관료제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 소방간부

- ① 관료제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권위의 근거는 전통이나 카리스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합리성에 기초한 합법성에서 나온다.
- ② 관료제는 법적 권위에 기초한 조직형태로, 관료는 법 규정에 있는 대로 명령에 복종한다.
- ③ 직무의 수행은 전문성이 낮은 일반행정가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어 다방면의 훈련을 필요로 한다.
- ④ 관료제에서 직무의 집행은 서류나 문서에 의하여 행해지며 조직의 재산과 사유 재산은 구분된다.
- ⑤ 관료는 부업으로서 행할 수 있는 성질의 직업이 아니라 전임적인 성격의 직업이다.

해설

막스 베버(Max Weber)의 근대관료제의 특징으로 보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

- ① (○) 산업사회의 근대관료제는 법과 이성을 권위의 근거로 하여 합리적·합법적 지배가 이루어진다.

■ 지배의 유형(권위의 정당성 기준)과 관료제의 유형(형태) - M. Weber

지배의 유형	권위의 정당성 근거	관료제 유형	특징
카리스마적 지배	초인적 자질·능력에 대한 외경심(畏敬心)	카리스마적 관료제	전통이나 법을 무시하고 개인의 초인적 자질을 바탕으로 자의적인 지배.
전통적 지배	전통·신성함·미신	가산(家産)관료제	전통·선례를 바탕으로 혈연에 의한 세습적 지배.
합리적·합법적 지배	법규	근대관료제	법에 의한 지배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지배.

- ② (○) 관료의 권한과 직무범위는 법규에 의해 명확하게 규정되고 권한은 사람이 아니라 직무에 부여되며 권한 남용이나 임의성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이며 예측 가능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진다(법규에 의한 지배).
- ③ (×) 관료제는 자격 또는 능력에 따라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분업의 원리에 따른다. 자기가 맡은 분야의 유능한 기술을 가진 전문인을 양성하여 분업화된 직무를 맡긴다(전문화와 분업).
- ④ (○) 모든 직위의 업무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의사결정을 공식화하기 위하여 문서로 이루어지고 문서로 보관된다(문서주의).
- ⑤ (○) 관료로서의 직업은 잠정적이 아닌 생애의 직업이자 전임직업이므로 겸임은 금지되며, 직무수행 대가로 보수를 규칙적으로 지급받고(봉급의 기준은 성과가 아니라 지위·기능·근무연한이며 주로 연공서열을 기준으로 한 연공급 지급), 실적과 연공에 의한 승진, 퇴직금 등 직업적 보상을 받으며, 직무에 전념하게 한다(관료의 전임성(專任性)).

답 ③